

2026 전북연구원 10대 연구 아젠다

|도민경제| 포용적 경제로 다시 일어서는 기업·소상공인

|농생명산업| 대한민국 첨단 농생명산업 수도, 전북

|문화·체육·관광| K-컬처로 세계와 연결되는 전북

|균형발전| 정주·생활인구와 교통대동맥으로 여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도민행복| 도민을 온전히 지키는 복지·안전 사회

2026년 전북연구원 10대 연구 AGENDA



01

도민경제 : 포용적 경제로 다시 일어서는 기업·소상공인

Agenda 1 : 피지컬AI· RE100 대전환의 선도모델 정립과 확산

주요 과제 : 피지컬AI 기반 첨단 모빌리티 산업 전환을 위한 전북형 모델 마련방안, 전북 Physical AI 기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전략 연구, 전북자치도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기초 연구, 전북형 재생에너지 기반 소득모델 마련 방안, 새만금 RE100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여건 기초조사

Agenda 2 : 전북 성장엔진 고도화로 산업혁신 생태계 강화

주요 과제 : 전북자치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기본방향 연구, 노화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방향 연구, 전북과학기술원 기본방향 설정 연구, K-방위산업 MRO 클러스터 조성방향 연구

Agenda 3 : 전북경제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전주기 밸류체인 고도화

주요 과제 :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육성사업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전북형 수출 지원 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전북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연구,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민간투자유치 전략수립 연구, 전북형 지역거점 창업도시 모델 개발

02

농생명산업 : 대한민국 첨단 농생명산업 수도, 전북

Agenda 4 : 농생명산업 특화 발전과 농촌사회 혁신역량 강화

주요 과제 : 스마트농업 혁신 AX 거점 육성 전략 연구, 동물헬스케어 산업 발전 방안, 전북자치도 맞춤형 메디컬 푸드 산업 육성 방안 연구, 전북형 수산업 특화 발전방안 연구, 전북자치도형 특화 농촌마을 모델 발굴 및 확산 방안, 농촌주민 역량 강화 농촌경제사회서비스 교육과정 체계화 방안

03

문화·체육·관광 : K-컬처로 세계와 연결되는 전북

Agenda 5 : 문화체육관광정책의 새판 짜기와 국내 거점화

주요 과제 : 제8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2026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객 실태조사,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및 지역문화 진흥 계획, 제2국기원 건립 기본구상, 전북특별자치도 미식관광 활성화 방안

04

균형발전 : 정주·생활인구와 교통대동맥으로 여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Agenda 6 : 지역특화형 정주인구 역동성 회복

주요과제 : 청년 정주형 지역사회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 연구, 청년수당 지원사업 효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인구정책 발전 전략 연구, 전북 출생 반등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대응 방안 연구,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컨설팅

Agenda 7 : 생활인구 유입·정주화 제도 고도화

주요과제 : 장기생활인구 등록제 도입방안 및 추진전략 연구, 전북사랑도민증 성과 분석 및 발전전략 수립 연구, 외국인정책의 전략적 대응 방향 연구, 전북자치도 E-7 계열 비자 활성화 방안 연구, 자치단체 ODA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 및 정착 지원 방안 연구

Agenda 8 : 지역 중심 국가균형성장 전략축 재설계

주요과제 :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연계 지역발전전략 수립 연구, 전북 지역균형발전 권역 협의체 구성 및 공동사무 발굴 방안, 전북 중소도시 은퇴자마을 조성 전략 연구, 제5차 섬발전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전북도 대응 방안 연구, 전주권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연구, 익산미륵사지휴게소 고속도로 환승시설(EX-HUB) 타당성 검토

05

도민행복 : 도민을 온전히 지키는 복지·안전 사회

Agenda 9 : 전북형 돌봄기본사회 기반 조성

주요과제 : 전북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실태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전북형 기본사회 추진전략 연구, 전북 사회서비스원 민간지원사업 전략 수립, 제6기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인권기본계획 수립

Agenda 10 : 지역주도 기후·생태·환경 정책모델 선도

주요과제 :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성과관리 방안 연구, 전북형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북형 환경영향평가 협의모델 개발, 전북 삼천리길 추진상황 점검 및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 방안

피지컬AI·RE100 대전환의 선도모델 정립과 확산

세계 산업은 인공지능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피지컬AI’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E100’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전북은 첨단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핵심산업의 AI전환과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피지컬AI, RE100은 전북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만의 피지컬AI를 첨단모빌리티와 바이오헬스 산업에 접목하고, 이를 폭넓게 적용하는 ‘AI 특화 시범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단순 생산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실질적인 수익으로 환원하는 재생에너지 소득모델을 만들고,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RE100 기업유치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전북이 AI와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적 모델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피지컬AI 기반 첨단 모빌리티 산업 전환을 위한 전북형 모델 방안

피지컬AI는 인공지능이 로봇, 자율주행, 제조설비 등 현실 공간과 결합하여 실시간으로 인지·판단·행동하는 기술로 산업 전반의 혁신을 견인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은 피지컬AI 실증단지 구축을 계기로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피지컬AI 기술개발 및 실증의 성과가 전북 내로 최대한 파급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피지컬AI 실증단지를 중심으로 급성장하는 산업을 육성하고, 전북의 여건과 경쟁력을 고려한 특별자치도의 특례 발굴, 특례와 연계된 피지컬AI 검·인증제도 모델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전북 피지컬AI 기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전략 연구

전북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 간 연계 강화, 기업 기반 확대, 제조-임상-실증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전북이 확보한 피지컬AI 실증단지와 연계하여 기존의 디지털 헬스케어에 넘어선 피지컬AI 기반 바이오헬스산업으로 확장시켜 전북만의 바이오헬스산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피지컬AI와 바이오헬스 산업의 정책·기술 동향과 전북의 산업 여건을 분석하여,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피지컬AI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전북형 피지컬AI 기반 바이오헬스산업의 중장기 육성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기초 연구

자율주행 로봇과 각종 모빌리티에 AI기술을 적용한 K-AI 시티가 미래 도시운영을 위한 핵심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피지컬AI R&D 및 제조산업 육성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를 실증하는 K-AI 시범도시는 관련 분야를 선도하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AI와 결합한 도시운영 모델을 조사·분석하고 전북자치도 내 주요 도시의 AI 시범도시 조성 여건을 파악하여 지역에 특화된 AI 기반 도시운영 모델을 발굴하고, 전북이 AI 특화 시범도시로 선정될 수 있는 조성 방향과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형 재생에너지 기반 소득모델 마련 방안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직접 에너지 생산의 주인공으로 참여하고, 이를 소득으로 연결하는 이익공유 설계가 요구된다. 특히 정부는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을 2,500곳으로 늘릴 계획에 있어 이에 대한 전북의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햇빛연금, 바람연금 등 최근 주목받는 사례를 분석하고, 전북의 재생에너지 규모별, 에너지원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주민의 참여방식과 이익공유 방식을 담은 소득모델을 마련하고자 한다.

새만금 RE100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여건 기초조사

정부는 RE100 달성을 위한 개별 기업별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산업단지 단위에서 RE100을 지원하는 RE100 산단을 핵심 국정과제로 명시했다. 새만금은 국가산업단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 등 에너지전환, 수출제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RE100 산단의 최적 입지로 평가된다.

새만금이 RE100 산단 기업유치에 적합한 곳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산업용지, 전력공급, 용수공급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기반여건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북 성장엔진 고도화로 산업혁신 생태계 강화

글로벌 경제의 산업구조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IoT 기반 기술 기반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가속과 함께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저성장·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전환이 미흡한 전통 제조업 기반의 전북 산업 구조의 혁신 생태계 강화가 요구된다.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전북 산업의 성장엔진을 고도화하여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으로 재편해야 한다.

전북연구원은 2026년 산업의 성장엔진을 고도화하기 위해 가상융합산업 육성 방안과 노화융합기술연구원, 전북과학기술원, K-방위산업 MRO 클러스터 설립 및 조성 방향 등을 구상하고자 한다. 가상융합산업 육성 과제는 전북의 가상융합산업의 중장기 육성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통한 전북 산업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해 노화융합기술연구원과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방향을 . 또한 전북 방위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영역 확장을 위한 과제도 추진될 예정으로 이러한 연구과제 성과는 전북의 성장엔진을 고도화시켜 산업혁신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기본방향 연구

정부는 세계 최초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을 통해 AI 시대 도래에 따라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자치도가 가상융합산업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메타버스, 가상융합 콘텐츠 등을 연계하고, 가상융합산업으로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상증강현실(VR·AR),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가상융합기술을 중심으로 전북자치도의 산업, 인프라, 인력 등 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중점추진 분야의 성과와 연계 가능한 가상융합산업 육성 방향을 제안할 계획이다.

노화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방향 연구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화 관련 질환이 증가하면서 노화연구에 대한 사회적·산업적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바이오 산업 기반과 의료 및 기초 연구 역량을 보유한 전북은 노화 연구와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공공 연구 거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내의 노화 연구 및 정책 동향과 전북의 의료·산업·정책 여건을 분석하여 노화융합기술연구원 설립의 정책적 필요성과 추진 논리를 도출하고, 연구원의 비전,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초 구상을 통해 단계적 추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북과학기술원 기본방향 설정 연구

전북은 첨단소재, 재생에너지, 기계·모빌리티, 바이오 등 잠재력 있는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원천기술의 연구에서 실증, 사업화까지 연결할 수 있는 연구거점이 부재하여 산업구조의 한계와 R&D의 구조적 공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 연구·교육의 허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북의 핵심 산업과 기술을 중심으로 지역산업 육성을 선도하고 연구인프라 확충 및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기본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K-방위산업 MRO 클러스터 조성방향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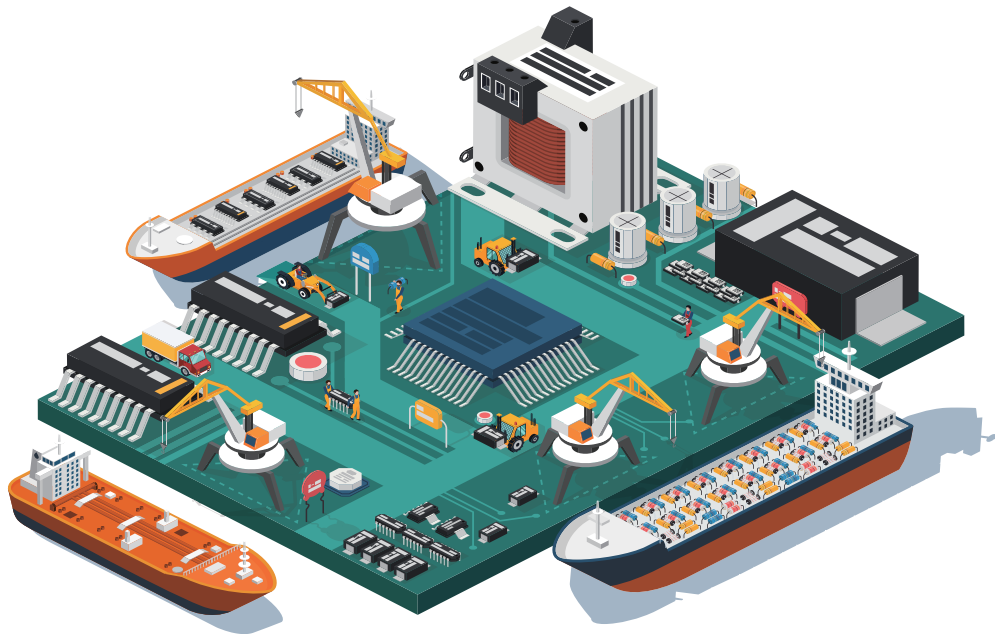
최근 높은 가성비, 신속한 납품능력 등으로 경쟁력이 확대되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K-방위산업을 전북이 선점하기 위해서는 핵심 산업·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방위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MRO 분야를 중심으로 K-방위산업의 핵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북자치도의 산업·기술·입지 등의 다양한 여건과 경쟁력을 고려하여 육·해·공을 통합한 K-방위산업 MRO 클러스터 조성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북경제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전주기 밸류체인 고도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외연적 성장을 넘어, 지역 내부의 혁신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외부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자생적 경제 구조'를 확립해야 하는 시점에 직면해 있다. 현재 전북은 우수한 로컬 자원과 새만금이라는 전략적 거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사업화의 낮은 효율성과 체계적인 글로벌 진출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부가가치의 역외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창업-상품화-해외 판로 개척'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전주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전북형 거점 창업도시 모델 개발, 기술창업 활성화 위한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연구, 전북 우수상품 육성사업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전북형 수출 지원체계 고도화 방안,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민간투자유치 전략수립 등의 연구를 통해 전북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과 도약 원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육성사업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07년부터 도내 우수한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공산품을 발굴하여 브랜드 파워를 높이고 판로를 지원하는 우수상품 인증(JB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 트렌드와 유통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단순히 상품을 선정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품질관리, 위생 점검, 그리고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 연구는 전북 우수상품 인증제가 단순한 '표시'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도록 품질(Quality), 판로(Market), 경영(Management) 측면에서 고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품질보증 → 신뢰도 향상 → 마케팅 및 판로 지원 → 매출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 마련, 단계별 고도화 로드맵 제안 및 마케팅·품질 관리 등 맞춤형 발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전북형 수출 지원 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수출 인프라와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통해 형성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전북수출통합지원센터와 새만금 수출 인프라 등 기존 자산과 연계하여,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속가능한 수출 지원 체계로 고도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전북 수출 활성화 정책의 이행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전북형 수출 지원 체계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한 수출 전략과 한인비즈니스 네트워크 기반 글로벌 연계 모델을 도출하고, 국정과제와 연계한 단계별 이행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전북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연구

전북특별자치도는 민간투자사의 역량을 활용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공공기술이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도내 출연연 분원 및 대학의 공공기술이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민간투자-공공기술 결합 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내 공급(대학·출연연)과 수요(기업) 간의 정보 비대칭 및 미스매치의 연결고리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진단하여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모델을 제안할 계획이다. 나아가 전북에 특화된 기술창업 스튜디오 육성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민간투자유치 전략수립 연구

새만금신항은 2026년 개항을 앞두고 있으나, 배후단지가 미성숙해 개항 효과가 축소되고 물류 병목 현상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항만의 경쟁력은 부두 뿐 아니라 보관·가공·통관·검역·수배송 등 배후기능 결합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개항 초기부터 배후 기능을 선제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배후부지 부족 리스크를 해소하고 개항과 동시에 작동 가능한 배후부지 활성화모델을 단계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배후부지 조성 관련 핵심 리스크를 시나리오로 구조화하고 타깃 산업별 필수 배후시설 사양과 활성화 우선순위 선정 후 기업유치형 배후단지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화·재원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북형 지역거점 창업도시 모델 개발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존의 분산된 도내 창업지원 시설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여 창업공간·시설·투자·창업프로그램·유관기관의 통합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중기부의 권역별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 선정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며, 전북 실정에 맞는 미래 창업도시의 밑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전북의 창업 여건을 진단하고, 지역산업·기술·인재 기반과 연계된 창업 생태계구조를 재설계하여 전북형 지역거점 창업도시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농생명산업 특화 발전과 농촌사회 혁신역량 강화

농어업·농어촌을 둘러싼 복합적인 위기와 대전환의 시기가 교차하고 있다. 기후위기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시장개방 가속화 등 대외적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가 농어업 기반과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편적 정책에서 벗어나 우수한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특화 발전과 지역사회 스스로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반영하여 농생명산업의 특화 발전과 농촌사회 혁신역량 강화를 중심축으로 연구과제를 설정하였다. 농어업·농어촌의 근간인 산업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첫째, 스마트농업, 동물헬스케어, 메디컬 푸드, 수산업 등 지역에 특화된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둘째, 농촌 공동체의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 스스로 경제·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 체계와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연구성과를 토대로 농생명 산업과 기술, 농촌 공간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고,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로드맵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스마트농업 혁신 AX 거점 육성 전략 연구

기후변화 심화, 노동력 부족, 시장개방 확대 등 구조적 어려움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이 농업 혁신의 주요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도 관련 법률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농업의 미래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혁신 거점 육성이 필수적이다. 전북자치도는 우수한 농업 기반과 자원을 갖춘 스마트농업 실행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 연구는 대규모 전문단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실증·검증, 시장진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스마트농업 산업을 고도화하고,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동물헬스케어 산업 발전 방안

전북은 동물용의약품, 반려동물 연관산업, 실험동물 및 연구자원 등 전후방 산업이 집적되어 있으며, 지역 내에서 완전적인 산업 연계가 가능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현재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효능·안전성 평가(1단계), 시제품 생산(2단계), 임상시험(3단계) 등 단계별 핵심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다.

이에 국내의 동물헬스케어 산업의 실태를 정밀 분석하고, 이를 전북의 인프라와 연계하여 산업 경쟁력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동물헬스케어 바이오뱅크(4단계) 구축과 동물헬스 벤처타운(5단계) 조성을 핵심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산업·연구·벤처·인력 양성을 아우르는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북자치도 맞춤형 메디컬 푸드 산업 육성 방안 연구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자 급증에 따라 맞춤형 영양관리를 위한 메디컬 푸드(Medical Food)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식품·제약 기업 간 협업을 통해 특수의료용도 식품의 품목 다양화와 생산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아울러 관련 법제 정비도 가속화되어 2026년 하반기에는 '의료용식품법(가칭)' 발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산업 현황과 정책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북자치도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농생명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원료공급부터 연구개발, 생산, 수출에 이르는 관련 산업 발전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북형 수산업 특화 발전방안 연구

기후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청년 인력 감소 등 구조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업의 첨단화·저탄소화·지속가능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갑각류·육상 김·토하 등 차별화 가능한 특화 수산자원을 기반으로 전주기 산업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선점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전북자치도의 갑각류·육상 김·토하 등 특화 수산물을 중심으로 R&D-생산-가공-유통-수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와 스마트양식, 저탄소·친환경 기술, 디지털 기반 운영체계를 결합한 첨단·지속가능 수산업 모델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북자치도형 특화 농촌마을 모델 발굴 및 확산 방안

그간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사업이 지속되었으나, 인구 감소와 유출로 사업 효과의 지속성이 약화되면서 시설물이 유휴자산화되고 공동체 활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방치된 유휴자원을 지역 고유의 특화 자산 및 스토리텔링과 결합하여 지역만의 정체성을 담은 '농촌특화마을' 모델 발굴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유휴자원을 경제적 가치 창출의 거점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주민의 소득 수준을 높이고, 위축된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농촌주민 역량 강화 농촌경제사회서비스 교육과정 체계화 방안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생활 상품·서비스 제공 주체가 부족한 농촌사회에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주민의 사업화 역량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에 의거한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전국 교육훈련 기관'을 유치하여 운영 중으로 농촌경제사회서비스 교육과정을 농촌지역·지역사회 현실을 고려해 다양한 방안으로 개편해 나갈 과제가 요구된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전국·광역-기초지원기관과 광역 거점농장 등 고려하여 정립할 필요가 크다. 이에 기반하여 농촌경제사회서비스 교육과정을 체계화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훈련기관 운영 교육과정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문화체육관광정책의 새판 짜기와 국내 거점화

지난해 전북에서는 대통령 선거 공약부터 국책사업, 미래를 짊어질 메가 프로젝트가 발굴·제안되었다. 큰 노력 끝에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더 강화된 사업화 논리가 필요하고, 새로 제안된 사업은 좀 더 구체적인 구상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새로운 사업도 더 발굴되어야 한다. 지역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면서, 지역에 한정된 사업이 아니라 국내 거점을 목표로 하는 치밀한 방안이 필요하다.



제8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전북의 관광개발 계획은 국가 관광정책 및 법정계획과의 정합성뿐 아니라, 기존 관광개발 정책과의 일관성 및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는 전북 관광 공간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관광의 성장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광 여건과 수요 변화, 상위·관련 계획, 제7차 권역계획의 성과를 종합 진단하고, 앞으로 5년(2027~2031)을 이룰 관광 개발의 실효적인 구상과 단계별 추진계획이 수립된다. 사업의 추진체계, 재원 조달 방안, 성과 관리체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운영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6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객 실태조사

관광객 실태조사는 전북 관광정책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되었으나, 2016년 이후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관광 환경과 수요구조가 크게 변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가 구축되지 못하였다. 10년이 지난 지금, 전북의 관광객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관광객이 전북을 방문하는 목적, 만족도 및 재방문 의사 등을 조사하여 최신 관광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체류시간과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 시군 관광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가 제공되리라 기대된다.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및 지역문화 진흥 계획

「전북특별법」 특례에 따라 지정된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의 활성화 계획이 조례에 의거 수립되어야 한다. 해양문화유산의 발굴·보존을 넘어 지역 발전으로 연계되는 활용 전략이 마련되어야 하고, 해양문화유산의 국제적 거점으로 만드는 사업도 구상되어야 한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이자 전북 지역문화 진흥의 밑그림을 그리는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도 중요하다.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의 내실 있는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

제2국기원 건립 기본구상 수립

국기원은 시설 노후화로 운영 안정과 효율이 저하되어 세계태권도 본부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제2국기원 건립이 주목받고 있다. 국기원의 중심 기능인 세계태권도연수원이 무주 태권도원으로 이전한 만큼, 상징성·역사성·전통성을 갖춘 국기원 제2관의 무주 건립은 진정한 의미의 태권도 성지화의 완성이다. 태권도 기관, 교육·연구기관, 민간기업을 집적화하는 태권도 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이 구상되어야 한다.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가 무주 태권도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관련 기관 집적화의 동력이 확보되었다. 제2국기원의 무주 건립 필요성과 당위성을 비롯하여, 최적의 건립 규모 등 태권도 산업 생태계 조성의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미식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국가 관광정책 기조가 K-컬처·K-푸드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다. 미식(美食)이 체류형 관광 및 지역 소비 확대를 견인하는 핵심 관광콘텐츠로 부상한 지 오래다. 이에 발맞춰 2025년 7월 「전북특별자치도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었고, 조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체계적인 정책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미식관광 정책과 트렌드를 분석하고, 전북 미식관광의 자원과 수요를 진단하여 국가 관광정책을 반영한 전북형 미식관광의 개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 개념에 맞춰 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사업·콘텐츠 중심의 실행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지역특화형 정주인구 역동성 회복

인구 수도권 집중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심화로 지역 정주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이제는 기존 시설 조성 중심 정책이나 단기적 인구 유입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수요를 반영한 ‘사람 중심’의 지역특화형 정주 인구 역동성 회복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청년 정주 혁신생태계 구축과 청년수당 효과분석을 통해 정주 여건(일자리·소득·주거·돌봄) 패키지의 실효성을 검증·재설계하고, 인구정책 발전 전략과 최근 출생아 수 반등이라는 기회 요인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대응 과제를 결합한 인구정책 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과의 연동을 강화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주 인구의 역동성 회복 지역특화 사업을 우선순위화하고, 자원 배분-집행-환류까지 연결하는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



청년 정주형 지역사회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 연구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외부 기업을 유치하거나 일자리를 알선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주체로 성장해야 한다. 단순 일자리 매칭과 강의실 중심의 이론 교육에서 탈피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해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제 해결형 인재 육성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 현장이 곧 배움터가 되는 ‘현장 기반 역량 강화(Field-based Learning)’ 모델을 구체화하고, 청년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착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민·관·학 협력을 기반으로 청년에게 실전 경험과 성장 경로를 제공하는 ‘전북형 지역사회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년의 활동 경험이 실제 창직과 정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내 활동가 현황 진단 및 국내외 우수 사례 분석을 수행하고, 시설(H/W) 중심의 투자를 보완할 소프트웨어(S/W) 중심의 체계적인 육성 전략을 제안할 계획이다.

청년수당 지원사업 효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전북형 청년수당이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청년의 고용 안정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최근 3년간(’23~’25)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혜 청년의 지원 전후 변화를 추적하여 정책의 실질적 체감 효과를 분석하고, 소득·연령·직군별 특성을 고려해 정책 효율성이 높은 핵심 타겟층을 발굴함으로써 제도를 고도화하고자 한다.

추적 조사와 심층 인터뷰(FGI)를 활용해 수당 지원이 구직 의욕과 심리적 안정에 미치는 정성적·정량적 효과를 입증하고, 수혜 집단 내 비교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정착을 이끄는 핵심 요인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적정 지원 규모 및 연계 프로그램(취·창업, 문화 등) 활성화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요자 맞춤형 혁신 전략을 제안할 계획이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인구정책 발전 전략 연구

저출생·초고령화와 청년유출이 심화되면서 전북 인구구조의 급변화와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 인구정책은 실·국별 사업을 취합·재배열하는 경향성이 높고, 성과지표 설정·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가 미흡하여 정책의 실효성, 도민 체감도, 가시적 성과가 낮은 상황이다.

이에 전북 인구구조 변화의 실태 진단과 원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최근 국가 인구정책 기조 전환 방향을 반영하여 현행정책의 문제·개선점을 도출하고, 정주 인구 확대 중심 접근을 넘어 인구 유입·정착 성과 중심의 대응체계로 전환하는 인구정책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전북 출생 반등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대응 방안 연구

’24년 출생아 수는 6,780명으로 전년 대비 158명(+2.4%) 증가했고, 합계출산율(0.78→0.81)·조출생률(3.8→3.9)·조혼인율(3.1→3.7)도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다만 출생구조는 주로 첫째아 중심으로 개선된 반면, 둘째·셋째 등 추가 출산으로의 전환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이에 첫째아 증가 흐름을 정책적 기회로 적극 활용하되, 둘째·셋째 출산 전환을 가로막는 핵심 장벽을 규명해, 전북의 출생 반등을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가능한 구조로 전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둘째·셋째 추가 출산을 촉진하는 전북 맞춤형 정책 패키지로 재설계하고자 한다.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컨설팅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이후 4년 차를 맞아 수행된 성과 진단 결과, 기초 인프라 확충의 성과 이면에 킬러 콘텐츠 부재, H/W 매몰 등 이른바 ‘3무(無) 현상’의 한계가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기금 사업의 패러다임을 시설 건립(Building)에서 콘텐츠와 연결(Bonding)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존 연구의 제언을 실행에 옮겨, 2027년 투자계획 수립 단계부터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전략적 재설계를 추진해야 한다.

본 컨설팅은 지난 진단 결과를 통해 도출된 ‘11개 시·군별 7대 표준 모델(Micro)’과 ‘3대 초광역 협력 벨트(Macro)’ 전략을 2027년도 실제 투자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적용하고 구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순한 계획 수립을 넘어, 기금 투자의 효율성을 담보할 소프트웨어(S/W) 의무 할당제 및 플러그인형 광역 사업 도입 등 제도적 개선안을 현장에 착근시켜 전북형 기금 생태계의 실질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생활인구 유입·정주화 제도 고도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기존의 정주인구 중심 접근을 넘어선, 내·외국인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인구 유입 전략이 요구된다. 단순 방문을 넘어 지역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생활인구’의 제도적 정착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과 대학을 지탱할 ‘외국인 인재’의 안정적인 유입과 정주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특히 정부의 복수주소제 도입과 이민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전북만의 차별화된 인구 활력 모델을 정립하고 정책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전북연구원은 내국인 생활인구 확대와 외국인 정착 지원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제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우선 ‘전북사랑도민증’의 내실화를 통해 관계인구를 확보하고, 이를 ‘장기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정주로 유도하는 단계적인 ‘인구 유입의 사다리’를 구축한다. 동시에 급변하는 이민환경에 맞춰 ‘전북형 외국인정책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여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E-7 비자 활성화’ 및 ‘ODA 연계 유학생 유치’와 같은 특화 전략을 구체화한다. 이를 통해 내국인의 체류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외국인력을 정주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장기생활인구 등록제 도입방안 및 추진전략 연구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방문객이나 단기 체류자를 넘어 지역에 실질적으로 머물며 활력을 불어넣는 생활인구의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상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특례'를 마련하여 '장기 생활인구'를 정의하고 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생활인구 활성화를 제도화하고자 한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복수주소제' 도입에 앞서, 전북이 선도적인 모델을 정립하여 정책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장기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제도의 범위 및 인센티브 설정 등 추진전략과 관계인구 연계방안, 기대효과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통근·통학, 휴양 등 다양한 체류 유형을 고려하여 등록 대상을 구체화하고, 이들이 전북에 오래 머물게 할 실효성 있는 제도설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북형 생활인구 모델을 확립하고, 향후 관계인구를 정주민으로 유도하는 '인구 유입의 사다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전북사랑도민증 성과 분석 및 발전전략 수립 연구

전북자치도는 출향 도민과 전북에 애정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전북사랑도민증'을 운영하며 관계인구 확보에 노력해왔다. 하지만 제도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역 방문이나 소비 등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성과에 대한 분석과 고도화 전략은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의 관계인구 정책이 단순한 회원 확보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 제고와 장기 체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의 운영 실태를 냉철히 진단하고 발전적인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북사랑도민증 발급 현황과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타 지자체의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제도의 한계점과 개선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북사랑도민증 소지자가 관계인구를 넘어 '장기 생활인구'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혜택과 제도를 재설계하고, 앞서 제시한 장기 생활인구 등록제와 연계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전북의 인구 활력 증진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외국인정책의 전략적 대응 방향 연구

급변하는 중앙의 이민정책과 지방정부 권한 확대 기조에 대응하여, 기존 도 종합계획의 정책적 정합성을 높이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특히 현재 산발적으로 추진 중인 외국인 지원 사업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간 유사·중복성을 해소하고 예산과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정책을 재구조화하고자 한다.

유학생·근로자 등 유형별 수요 분석과 기 추진 과제의 실효성 평가를 토대로 '전북형 외국인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새롭게 설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입부터 교육, 취업,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과 「전북형 외국인정책 혁신 로드맵」을 제안함으로써, 지역 주도의 이민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E-7 계열 비자 활성화 방안 연구

최근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E-7 계열 취업 비자의 신설·확대에 대응하여, E-7 비자 취득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낮은 전북자치도는 우수 외국인력·외국인 생활인구의 지속적인 유입 및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E-7 계열 비자 활성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E-7 계열 비자 제도 및 정책 동향 분석, 지역별 E-7 계열 외국인 규모 및 추이 비교·분석, 전북자치도 E-7 계열 외국인력 체류·정착 경험 및 정책 수요 분석을 통해 지역·산업 여건을 반영한 전북형 E-7 계열 비자 경로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자치단체 ODA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 및 정착 지원 방안 연구

전북자치도의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은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유출로 정주민구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학업-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인구 정착 경로를 구축할 수 있는 핵심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해 형성된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 경로를 다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정착 지원 체계는 아직 구축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전북자치도가 추진 중인 ODA 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역 정착 전략과 연계하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자체-교육청-대학-산업계-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설계하고, 유학생의 유치·정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담조직 구축 방안 등 중장기적으로 추진가능한 '전북형 ODA 연계 유학생 유치·정착 지원 제도 모델(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지역 중심 국가균형성장 전략축 재설계

정부는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 심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성장과 균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국토공간구조로 전환하고 지역을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인 거점으로 재정립하고자 「5국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지역 주도의 경제·생활·행정체계 전환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연구원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성장거점 전략을 마련하고 전북 대도시권의 교통 경쟁력 강화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통합적 지역발전 모델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북은 독자적인 광역권 단위에서 경제·생활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구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 권역 협력형 행정·재정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균형성장을 선도하는 지역 실천 모델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연계 지역발전전략 수립 연구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선제적으로 유치 논리를 재점검하고 사전 준비를 통해 타 시도 대비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조기에 선별하고 전북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유치 전략 및 지역발전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유치 가능성과 파급효과가 높은 중점 유치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기관별 기능 특성과 전북의 전략산업·정책 여건을 연계한 유치 논리를 개발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전북 지역균형발전 권역 협의체 구성 및 공동사무 발굴 방안

지역균형발전사업이 개별 시·군단위로 추진되면서 광역적 파급효과와 권역내 시너지효과 창출에 한계가 인정되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시·군이 연계·협력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연계·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권역 협의체 구성 및 추진체계와 공동사무를 발굴할 계획이다. 권역별 협력이 필요한 사무에 대한 시·군의 수요를 바탕으로 권역 협의체 방식별 특성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공동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권역 설정과 공동사무 발굴 및 행정 추진체계를 제안할 계획이다.

전북 중소도시 은퇴자마을 조성 전략 연구

정부는 은퇴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여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마을 조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전북은 노인주거시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은퇴자 등 고령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은퇴자마을 조성 전략이 필요하다.

전북의 중소도시(군산시)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 여건, 관련 제도 및 사례 분석, 거주 의향 조사를 바탕으로 베이비세대 은퇴자의 지속적인 재가 생활과 지역사회의 지속거주 (Aging in Place)를 실현할 수 있는 은퇴자마을 조성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제5차 섬발전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전북도 대응 방안 연구

섬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5차 섬발전종합계획(2028-2037)이 수립될 예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섬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의 섬 지역 특성 및 섬발전사업을 살펴보고, 섬 활성화 사례 분석, 정부 정책 동향 등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를 파악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섬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제5차 섬발전종합계획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섬발전사업계획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주권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연구

전주·완주 등 생활권 확대에 따라 타 대도시권 대비 부족했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여, 다가오는 제5차 계획기간('26~'30)을 전주권역에 실질적인 광역교통시설이 도입되는 '광역교통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이에 이번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그간 부재했던 광역도로, 광역철도 등 핵심 광역교통시설을 국가계획에 반드시 반영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의 원년을 실현하고 전북 대도시권의 교통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익산미륵사지휴게소 고속도로 환승시설(EX-HUB) 타당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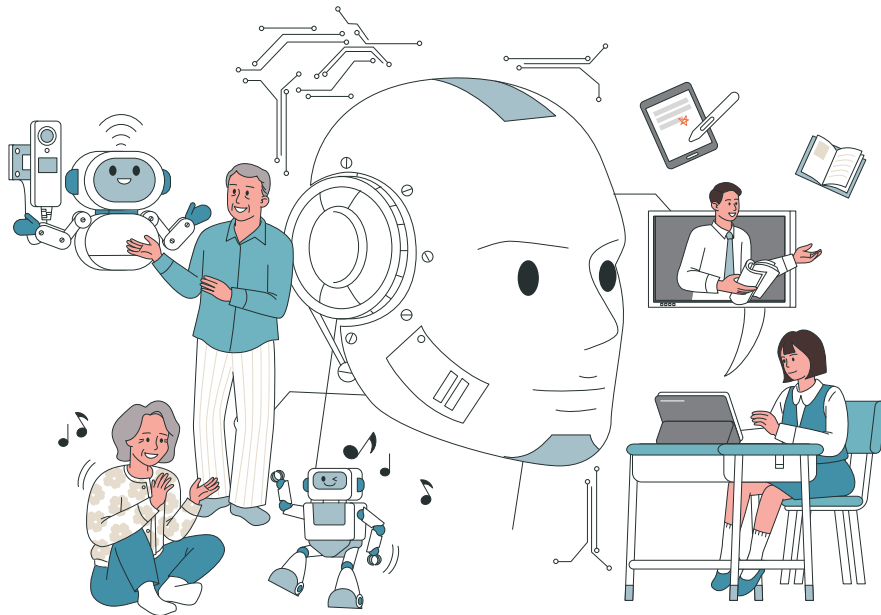
호남고속도로 익산미륵사지휴게소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고속버스·시외버스와 지역 대중교통 간의 원활한 연계 환승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접근성을 제고하고 전북 권역의 대중교통 환승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휴게소 부지 내 고속도로 대중교통 환승시설(EX-HUB) 도입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전북의 관광 자원과 연계된 최적의 고속도로 환승 모델 조성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북형 돌봄기본사회 기반 조성

AI시대의 도래로 인해 첨단산업을 위시로 행정체계와 산업구조 그리고 시민의 일반적인 생활은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같은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AI의 혜택을 누구나 공평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제·사회구조를 만들어내야 하는 시대적 과제도 함께 안고 있다. AI는 급속한 기술 진보와 복잡한 데이터기반 장치 등으로 인해 다양한 정보를 취득한 일부 계층의 전유물로 활용될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전북연구원은 AI가 주는 혜택을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고, 안전하게 활용하며, 책임 있게 참여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책과제를 고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북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과 함께 취약계층의 기본 돌봄 및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실태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치매노인과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권리옹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취약계층의 자기결정권 보호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적 조력은 기본사회가 지향해야 할 소수자 권익보호의 핵심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치매노인이나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후견제도의 이용실태를 분석하고 공공후견인 양성 및 지원방안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북형 기본사회 추진전략 연구

국정기조인 ‘기본사회’가 본격화(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등)되고 있다.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돌봄·의료·주거·교통·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연계된 종합 정책이 관건이다. 기존 부서별 대응만으로는 체계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 전북은 고령화, 농촌 중심의 공간 구조, 생활서비스 접근성 격차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의 기본사회 정책 방향과 제도 변화에 맞춰 전북형 기본사회 개념과 추진 방향을 정립하고자 한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책모형·선도과제, 단계별 실행전략을 마련하여 기본사회 선도지역으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전북 사회서비스원 민간지원사업 전략 수립

도민의 사회서비스 욕구는 기존 보호 중심의 단조로운 형태에서 주거와 의료, 전문적인 상담, 돌봄정책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어 사회복지현장의 전문성도 변화된 욕구에 맞춰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종사자의 교육수요조사에 기초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적용가능 한 현실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 정책변화에 대한 진단과 교육수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고도화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책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6기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의 위기와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그리고 1인 독거가구의 확대 등으로 인해 복지욕구가 다양화 및 다변화되고 있다. 특히, 치매노인과 고령장애인, 고립은둔 청년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증가로 인해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에 대한 정책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돌봄기본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실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도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중앙정부의 정책동향을 검토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 복지방향을 제시하고 복지도시 전북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실천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인권기본계획 수립

기후위기와 AI시대의 도래 등 사회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빈곤가구와 정보소외계층의 기본적인 인권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정보취약계층은 정보의 개발과 취득, 활용의 모든 과정에서 소외됨으로써 정보사회의 기본적인 인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환경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담론을 인권의 관점에서 점검하고 도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실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새로운 시대환경에 발맞춰 도민의 인권 수준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인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인권도시 전북자치도를 조성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주도 기후·생태·환경 정책모델 선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생태·환경 정책은 선언적 협약중심에서 성과관리 및 지역실행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 NDC(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책임이행과 지속가능한 국토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맞춤형 선도모델 구축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2026년 전북연구원은 탄소중립 성과관리 방안과 전북형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국가 NDC 이행체계와 연계된 지역 차원의 실행 및 이행평가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모델 개발을 통해 환경정책 자치권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전북 삼천리길 추진상황 점검과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생태자원 활용과 물 관리 정책을 지역 활성화와 연계함으로써, 정부의 기후·생태·환경 정책을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전북형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성과관리 방안 연구

지자체 주도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 간 탄소중립 정책의 적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정책 연계가 부족한 현실이다. 이로 인해 탄소중립 세부사업의 종합적인 평가와 정책의 개선 및 환류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탄소중립 공통 평가지표와 평가절차, 평가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환류할 수 있는 성과관리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탄소중립 정책 동향과 국내외 이행평가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성과관리 구조를 설계하고 핵심지표를 도출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 성과관리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전북형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탄소중립은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농축산 및 흡수원 등 각기다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전북자치도의 시군은 도시, 농촌, 산지 및 해안까지 공간구조가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탄소중립 및 전북자치도의 특징을 감안할 때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본격적 이행과 정부의 정책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전북자치도 및 시군의 부문별 탄소중립 거버넌스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선진 사례를 통해 전북만의 효과적인 탄소중립 이행에 맞는 거버넌스 모델을 설계하고자 한다. 또한 협업체계 운영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과제 도출 등을 통해 실질적인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북형 환경영향평가 협의모델 개발

전북특별법 제정으로 4개 특례 지구·단지(농생명산업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지구,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이 한시적(3년)으로 이양되었다. 기후환경에너지부는 성과평가의 기본방향, 성과평가 방법, 성과평가 절차, 그 밖에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고 존속기한 연장 여부, 폐지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검토하여 존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응하기 위해 개별사업의 특성을 담은 평가항목 및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독자적 모델을 개발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북 삼천리길 추진상황 점검 및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전북은 2030년까지 시군에 흩어진 생태환경 자산과 역사문화 자산을 통합적으로 체험하면서 체류형 생태관광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전북 삼천리길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하드웨어(노선 연결)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생태교육과 체험, 마을비즈니스를 연계한 활성화 사업은 부족한 실정이다.

삼천리길의 현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의 특화자원과 주민의 참여기반 마련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삼천리길을 활용한 전북 고유의 생태경제 창출 등 시너지효과 창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 방안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홍수와 가뭄을 비롯한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 등 복합적 물문제 대응과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24.10.25.)하고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해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2026년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물순환 왜곡도, 물이용 취약성, 물재해 취약성, 물환경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순환 취약성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전북특별자치도내 종합평가 I, II 등급 지역 중 물순환 촉진이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물순환 개선방향과 세부사업을 제안하고 촉진구역 지정과정을 지원하고자 한다.

2026 전북연구원 10대 연구 아젠다



발행인_최백렬 발행처_전북연구원

※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